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2-6호

발행일: 2022. 9. 20. (화)

제398회 국회(임시회, 2022. 7. 4. ~ 2022. 8. 2.)

제400회 국회(정기회, 2022. 9. 1. ~ 2022. 12. 9.)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다. 장애예술인 지원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의 출처는 링크된 원문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1. 개관

제398회 국회(임시회)는 2022년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으며, 회기 중 8차례에 걸친 본회의가 있었으나, 8월 2일 제8차 본회의에서만 3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9월 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1건의 법률안이, 9월 7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12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398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1)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다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허가할 수 있는 특례를 새롭게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제400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가 세부담으로 인하여 보유주택을 매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 융합의학 연구소 등 융합의학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 온라인 비디오물 시장의 원활한 유통 기반 구축과 관련 콘텐츠 산업의 확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넓혀주고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398회 국회(임시회)의 2022년 8월 2일 본회의와 제400회 국회(정기회)의 2022년 9월 1일 본회의 및 2022년 9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16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법제사법위원회(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등 14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교육위원회(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0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 위원회(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등 11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 등 11인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의원 등 14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0인
	민생경제안전 특별위원회(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생경제안전 특별위원장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생경제안전 특별위원장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생경제안전 특별위원장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장애예술인 지원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개요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 기본안에서 세제 개편 기본방향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며, 조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이 중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위해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강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개정법률안들이 연이어 통과되면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2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7일 본회의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와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기획재정위원회	<p><u>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u></p> <p>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함(안 제8조제4항, 제9조, 제17조, 제20조의2 신설).</p>	2022-09-07 (원안가결)

2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p>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p>	2022-08-02 (원안가결)
---	-----------------	---	----------------------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재부)

과제목표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 내용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체계 개편 및 세부담 적정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도입 등
-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
-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주거안정 세제지원 강화) 상생 임대인 제도 확대 개편,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및 주택임차자 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취득세 개편)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및 다주택자 중과 완화

[120대 국정과제]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재부)

과제목표

명확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및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 물가 안정을 통한 부담 경감 및 대외부문 충격의 국내 영향 최소화

주요 내용

(경제정책방향 마련) 시장 중심 저성장 극복, 생산적 복지 등 중장기 경제정책 기조 설정 및 연도별 경제정책방향 수립·이행 점검

(안정적 거시·재정·금융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 및 재정·금융·외환 정책공조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국제시장 선진화(서민 물가 안정화) 비축기능 강화, 수급안정 대책 등을 통해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의 국내 파급영향 최소화

-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방안* 등 국내 생활물가 안정방안도 마련·시행

* (예) 출하조절시설 확충,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대외리스크 관리 강화) 외채·외화유동성 상시 모니터링, 글로벌 신용 평가사 협의 강화 등 대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관리

- 리스크 발생시 건전성 규제(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화LCR 등)를 적시에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외화유동성 공급채널을 다변화하는 등 효과적 대응 추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재부)

목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

4대 정책 방향

민간중심 역동경제

- ✓ 규제혁파 · 기업활력 제고
- ✓ 기업투자 확대 · 일자리 창출
- ✓ 중소 · 벤처기업 육성
-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체질개선 도약경제

- ✓ 공공 · 연금개혁
- ✓ 노동시장 개혁
- ✓ 교육개혁
- ✓ 금융 · 서비스산업 혁신

자유 · 공정
혁신 · 연대

미래대비 선도경제

- ✓ 과학기술 · R&D 혁신
- ✓ 첨단 전략산업 육성
- ✓ 인구구조 변화 대응
- ✓ 탄소중립 · 기후위기 대응

함께가는 행복경제

- ✓ 사회안정망 강화
- ✓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 ✓ 복지시스템 고도화
- ✓ 지역균형 발전

국민안정
대응

민생 안정

- ✓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 ✓ 주거안정

리스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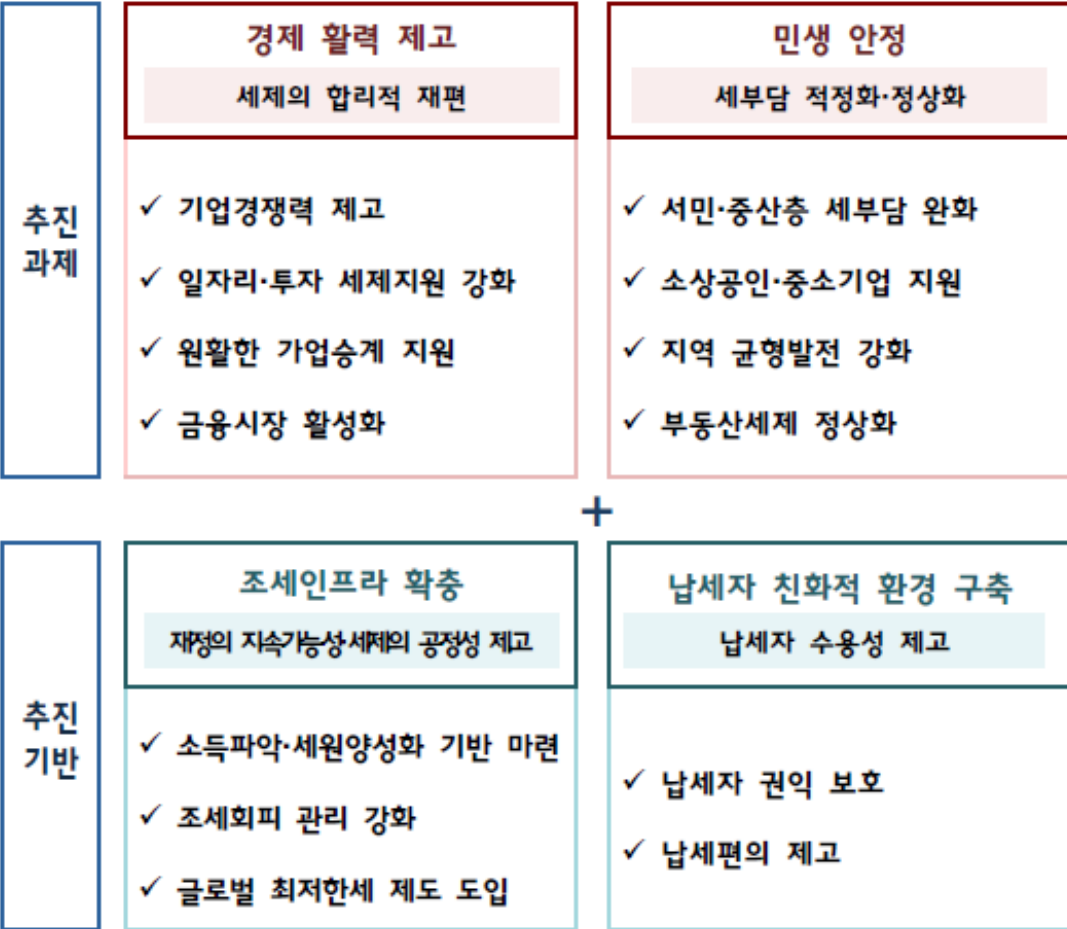
- ✓ 경제안보 대응
- ✓ 위기관리 강화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경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기재부)

- ◇ ¹경제 활력 제고와 ²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
 - 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
→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 ②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 ◇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

목표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출처: 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2022. 7. 21.

참고 자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2. 8.

류성걸 의원안: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등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2022. 7.

서병수 의원안 등: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

[2022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기획재정부 2022. 7. 11.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기획재정부 2022. 7. 21.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기획재정부 2022. 7. 2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 5. 13.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있어 종래 교부세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를 고려한다면 최근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나 과세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납세자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적정 부담의 보유세 부과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2022. 8.

우리나라의 국세청 세수 대비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세목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해마다 납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 하지만 최근 공평과세 측면에서 보유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차별 과세되는 문제와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세액산출 과정에서 과세표준 설정과 세부담의 상한 기준이 다소 비합리적이고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공평성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유 목적과 보유 형태에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여 거주 주택에는 혜택을 주고, 비거주 주택은 증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2주택자의 혜택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세에서 차감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세액산출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액산출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현행 체계를 대신하여 취득가격을 기초로 하여 재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부담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결정하고 직전년도 납부세액이 없는 신축 건물은 최소세액 비교법을 통해 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납부유예 규정을 완비하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일정률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연구보고서 2022. 4.

중부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편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선 과세 단위개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부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가족간 증여 등을 통한 조세회피가능성이 매우 높은 세목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목의 경우 과세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처럼 개인별과세는 여러 가지 모순점을 초래하고 있다. 다른 한편 중부세가 재정과세와 정책과세의 이중의 의미를 가지는 조세로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세율수준이 요구된다. 과연 현재의 세율이 그러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여론조사 보고서 2018. 6.

- 일반국민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책밀접대상자(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한 인식 등을 파악하고자 함.
- 본 조사의 결과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개요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산업계에서 활약할 전문인재부터, 인문·사회계열 등 각자의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인재, 그리고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인재 등 수준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범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정부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2022년 9월 7일 본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보건의료환경 및 산업 패러다임에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고자 융합교육 및 연구 등 국가보건의료경쟁력 강화, 선진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교육위원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의 국립대학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보건	2022-09-07 (수정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p>의료 환경 및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서 국가보건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학·이학·공학이 융합된 다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와 선진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호의2 및 제9조의2 신설).</p>	
2		<p>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p> <p>서울대학교병원은 국내의 대표적인 대학병원으로서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보건의료 환경 및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서 국가보건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학·이학·공학이 융합된 다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와 선진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호의2 및 제7조의2 신설).</p>	2022-09-07 (수정가결)

정책 동향

<p>[120대 국정과제] 81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부)</p>	<p>[120대 국정과제]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p>
<p>과제목표</p> <p>디지털·반도체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적기 양성</p> <p>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 SW·AI 및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p> <p>주요 내용</p> <p>(디지털 인재양성) 대학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 인재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기준 유연화,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 활성화 	<p>과제목표</p> <p>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소방·해경 등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통합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p> <p>재난에 대한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사후 조사·치료 강화</p> <p>주요 내용</p> <p>(대입제도 개편)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 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대입제도 개편(~'24.2월) <p>(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창</p>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전향적 규제개선 및 교원·교육과정·기자재 등 지원

- 반도체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 내 부트캠프 설치
- 전공·비전공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과 첨단분야 재교육·직업훈련 확대

(교원 SW·AI 역량 제고) 예비교원을 위한 권역별 연합체제 구축 및 교·사대 AI 교육과정 개발, 현장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 지원

-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 및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과정 개선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 정보교육 시수 확대 등 체계적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및 신기술 적용 교육 콘텐츠 개발

- SW·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운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초등단계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강화

- 저소득층 SW·AI영재교육, 다중문해력교육, AI학습프로그램 개발, AI 등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디지털전환 커뮤니티학습 활성화, 성인 디지털문해교육 강화 등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교육·경험·자격이력 누적을 위한 디지털 배지 부여

-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인재양성위원회 구성), 부처별 인재양성 데이터 연계 및 통계 인프라 개선

(민관협력으로 디지털 인재양성) 기업 설계 교육 과정 이수 후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운영, 국내외 인력활용을 위한 K-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청년 구직자 및 지역 전문가 대상 디지털교육과정 확대, 디지털전환 전문가 육성·활용

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및 안착지원

-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
-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

(AI 기반 기초학력 제고)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지원

-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보조인력 운영, 협력 수업 운영학교 및 다중지원팀 확대

(융합인재 양성) 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 및 융합연구 지원 확대,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융합형 인재 육성

-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 우수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 추진 및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학습·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취업경력까지 관리 가능한 개인별 포트폴리오인 '(가칭)마이포트폴리오' 플랫폼 구축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2022. 8. 22.) (교육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규제혁신, 선도대학 육성 등을 통한 디지털 전문인재양성

- 계약학과 활성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확대
- SW 중심대학 확대, 신산업 분야 마이스터대 확대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창업·창업 지원

- 주니어 BK21 도입, 디지털 분야 대학원 확대
- 연구지원 연계 인재 육성, 창업 교육 확대

인재 조기 확보를 위한 디지털분야 영재 육성

- 영재학교·과학교 SW-AI 특화 교육과정 운영
- 특성학교 디지털 기반 학과 재구조화 지원,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디지털 기술을 전공 분야에 자유롭게 적용하는 인재 양성

비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디지털 융합과정 운영

-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도입, 학사제도 유연화 지원

재직자의 디지털 분야 전환교육 지원

- 디지털 마이스터 육성, 산업인력 디지털 융합역량 강화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위한 디지털 직업교육훈련 지원

-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 K-디지털 트레이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 양성

대학 수준의 SW 등 디지털 교양과정 확대

- 대학의 자율적 디지털 혁신 지원
- 첨단분야 문제해결 프로젝트(WE-Meet) 추진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제공
- 신산업분야 온라인교육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범위 확대

다양한 평생학습 기제를 통한 디지털분야 학습 지원

- 자발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맞춤형 원격교육 지원
- 군장병 온라인 SW-AI 교육 제공
- 디지털 기초직무역량 교육 제공 인프라 구축

디지털교육 저변 확대

유·초·중등 SW-AI 교육 확대

- 유아 디지털 경험 접근성 제고, 정보교육(코딩교육) 확대
- SW-AI 융합교육 활성화, 선도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확대
- 디지털 분야 방과후·진로교육 확대

디지털 리더리시 함양을 위한 촘촘한 교육망 구축·운영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리더리시 교육
- 농어촌지역(초고) 디지털 튜터 배치
- 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SW 교육자료 제공

디지털 배지 및 재능사다리

- 디지털 배지 활용·확산 지원
- 재능사다리(진로상담, 후속과정 우선선발권 등) 구축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모든 교원의 디지털 전문성 향상

- 정보교과 교원 적정규모 확보 및 교수 임용 개방
- 교사-교수 재교육 지원, 교원양성기관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 디지털 역량 함양 교원 양성 추진체계 구축

AI·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교육혁명

-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지원
- 디지털 교과서 및 콘텐츠 지속 확대·보급

디지털혁신을 지원하는 교육환경 조성

- 제도적 기반 조성,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 마이포트폴리오 구축

출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8.22.\)](#) 교육부 카드뉴스/인포그래픽 2022. 8. 22.

참고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교육위원회 2022. 4.

조경태 의원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융합의학인재 양성 근거 마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교육위원회 2022. 4.

조경태 의원안: 국립대학병원의 융합의학인재 양성 근거 마련

[2022년 대한민국 인재양성 사업 안내서](#) 교육부 2022. 2.

[2022년도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운영관리 기본계획](#) 교육부 2022. 2.

[디지털 인재양성과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2022 여름호(통권223호)

지난 5월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디지털·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고, SW·AI·디지털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신기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술력이 가속화되어 후발 국가나 기업이 따라가기 쉽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AI 기술은 [그림 1]과 같이 미국과 비교할 때 87.8% 수준으로서 1.4년 정도 늦은 수준이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1). 또한, AI 두뇌지수는 세계 25개국 중 19위(50.59)이며, 세계 AI 두뇌지수 500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다(이승환, 2019). 따라서 AI 인재를 양성하려면 SW 교육뿐만 아니라, 과거의 ICT 교육 등 디지털 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표 1>과 같이 국정 과제를 통해 6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해결할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학자가 바라 본 새 정부 고등·평생교육 분야 국정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문제진단」 2022. 6. 16.

새 정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새 정부 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디지털, 대학 자율, 지방시대 등이다. 고등교육 관련 국정목표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이다. 이러한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디지털 인재의 양성, 학습혁명, 대학자율, 교육격차 해소, 지방시대 실현, 수요 맞춤형 교육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되었다. 새 정부에서는 강한 미래 지향성을 중심으로 첨단 분야, 즉 신기술, 신산업 분야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의 급속한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대학 관련 규제를 개혁하고, 자율을 확대하여 대학의 역동적 혁신허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방시대의 시작을 선언하고 지역 대학으로서의 지역혁신과 발전에의 기여를 요청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새 정부는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을 강하게 요청하는 한편, 그러한 혁신은 대학의 자율을 기반으로 하되 지역 또는 지방 중심의 대응과 공유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교육정보화 실태조사」의 지표로 알아보는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22. 6. 16.

2022년 5월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여섯 개 국정목표와 목표별로 설정된 20가지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교육 분야와 관련된 국정목표는 네 번째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열다섯 번째 약속인 ‘창의적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은 앞으로 새 정부에서 진행될 교육정책의 핵심 기조를 담고 있다. 이 열다섯 번째 약속에는 총 다섯 개의 세부 국정과제가 포함되었는데, 그 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다. 즉,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기에 대응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것이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성과관리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보고서 2022. 3. 3.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실있고 세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성과관리 방안 도출 및 적용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및 우수모델 공유·확산에 기여

[첨단·신기술분야 고급 인력의 육성 및 성장 지원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 12. 30.

본 연구는 최근 대두되는 첨단·신기술의 새로운 속성에 주목하여 첨단 신기술분야의 새로운 속성이 기술인력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를 고려했을 때 기술인력의 육성 및 고급인력으로서의 성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 장애예술인 지원

개요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예술을 전업으로 하지만, 개인 평균 소득은 8백 9만 원, 창작활동을 통한 수입도 2백 1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92.4%는 문화 예술활동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창작지원 및 수혜자 확대(70.5%)’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예술인에게 보다 많은 창작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예산과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회도 이와 같은 정책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행하였습니다.

2022년 9월 7일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참여기회를 넓혀주고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p>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2항제2호의2 및 제9조의2 신설).</p>	2022-09-07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p>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현행법상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의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선언적으로만 규정하여 해당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의 구체성 및 현실화 방안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되,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제도 도입 이후 인증신청 및 실제 인증사례가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p>	2022-09-07 (원안가결)
3		<p>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p> <p>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인 육성, 공연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공연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에 있어 ‘발표·전시·공연 시설의 부족’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고, 관람 시 편의시설·보조도구 등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는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의2·제3호의2 신설).</p>	2022-09-07 (수정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문체부)

과제목표

예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예술지원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와 예술산업 미래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공정한 맞춤형 예술지원) 예술인 정의 및 활동증명 제도 개선, 다년(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 문화예술 창작·향유 공간 조성

- 음악·무용 등 장르별 전용 공연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지역문화회관 활성화, 청년예술가 생애 처음·경력단절 이음 지원 확대, 전문·신진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예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 육성 및 문학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 지원

- 현장 실습 지원·파견 등 예술대학 활력 제고, 예술-기술 결합 작품활동 지원, 중앙-지역의 공연장·공연단체 간 창·제작 유통 지원, 공연예술 해외진출 활성화
-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 취약예술계층 국민연금 지원 강화,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 (장애예술 활성화)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 교류 활성화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지원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 (문체부)

비전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목표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삶의 질 제고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①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1-1.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다각화 1-2.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진출 및 창작물 유통 활성화
	② 장애예술인 일자리 등 자립기반 조성
	2-1. 공공영역의 일자리 확대 2-2. 민간영역의 일자리 확대
	③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3-1. 문화시설 및 공간 접근성 강화 3-2. 장애예술인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대국민 인식 개선	
④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기반 조성	
4-1. 장애예술인 지원체계 정비 4-2. 정책연구 및 신기술 컨버전스 촉진	
⑤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	
5-1. 장애예술인 양성교육 체계화 5-2.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출처: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2022. 9. 8.

참고 자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 8.

[이종성 의원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창작물 우선 구매 의무화 등](#)

[김예지 의원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창작물 우선 구매 의무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 3.

김예지 의원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현실화 방안 마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 3.

김예지 의원안: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등 포함

[2021년 문화예술정책 백서](#) 문화체육관광부 2022. 8.

[장애예술단체 활성화 정책의 방향 모색](#)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연구」 2021. 12.

최근 문화정책에서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장애예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장애예술 정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법정 계획이나 학계의 연구에서도 기존의 상대적 무관심을 넘어서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단체’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장애예술의 고유한 활성화 정책 구상을 위해 참고할 만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이차대전 이후 국제무대에서 예술정책을 주도해왔으며, ‘2012 런던올림픽’ 이후로 장애예술 정책을 선도해 온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 향후 장애예술 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이 분명한 ‘장애예술단체 활성화 정책’의 좌표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영국 장애예술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최근 장애예술 진흥 정책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정책 토양 위에서 성장하여 현재 영국을 대표하고 있는 16개 장애예술 단체들을 대상으로 기관별 주요 특징과 핵심적인 창작 및 운영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영국의 장애예술 정책 사례와 현장 사례가 향후 우리나라 장애예술단체의 활성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2021. 5.

본 연구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부 전략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예술인’은 총 5천908명이며 이중 발달장애는 57.1%, 지체장애 23.6%, 뇌병변장애 5.9% 순이며, 주된 활동분야는 ‘서양음악’(38.3%)이다. 장애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이 등재된 직업예술인 약 1천500명, 등재되지 못한 예비직업예술인 약4천300명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장애인예술활동가는 약 2만5천700명이다.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대부분이 자영업자 신분으로 프로젝트 형태의 단속적(斷續的)인 활동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독립기관(사단법인, 재단법인, 비법인), 소속기관(정부·공공기관, 민간기관, 장애인관련기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2차례 현장 종사자 FGI를 실시하였다. ……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첫째, 정책대상별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시했다. 둘째, 세부 추진 방안으로 공단-지역 협력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문화예술 지역 뉴딜 사업,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활동 활성화 방안,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협약고용모델 개발, 최종증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 위탁사업,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일자리 신설 및 민간 일자리 전이 지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안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플랫폼 구축, 연계고용제도 사업체 대상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 근로지원/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및 특화, 근로자성 판정지침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문화복지 관점에서 본 장애인예술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우리춤과 과학기술」
2021. 5. 31.

본 논문의 목적은 문화복지 관점에서 장애인예술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문화복지의 내재성과 특질이 장애인예술단체와 어떠한 연결 구도를 이루고, 상호 작용이 있는지를 추적하는 일은 복지구현이라는 복지의 일차 목적을 달성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복지의 포용성을 다시 한번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한다. 장애인, 문화복지에 대한 개념 확인을 토대로 장애인예술단체 운영의 실태를 이론적, 실증적 차원에서 진단했다. 선행사 검토를 포함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후, 연구 대상인 세 개의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세 가지 관점에서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화복지 개념의 충실성, 문화민주주의 지향성, 정책의 현실성을 적용했다. 여기에 질적 인터뷰를 통해 현장 연구(fieldwork)를 실행했다. 요컨대, 문화복지 관점에서 장애인예술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협의적, 광의적 의미가 수용된 문화복지 적용이다. 이는 복지의 대상이자 수단인 문화가 복지 측면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둘째, 문화권 기반 사회정책의 문화예술적 적용이 요구된다. 문화복지에 대한 기본적 접근 방식이 복지영역 차원, 사회서비스 관점에 무게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장애인 예술단체 개념 정립에 따른 정책 구현이다. 법률적 명문화에 따른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긴요함을 뜻한다. 넷째, 장애예술의 특수성 반영이다. 장애인예술단체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종합적인 문화복지 증대가 요구된다. ‘공동체’ 의식 속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담보되는 환경 조성 및 실행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시론 격으로 논의한 이 연구를 통해 문화복지 관점의 장애인예술활동이 더욱 활발 해지고, 장애인예술단체의 발전,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풍요로워지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 12.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이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예술 잠재력을 계발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장애인 스스로 주체적인 삶의 영위와 이에 따른 자아의 완성에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 예술인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과 접근권 보장은 이들을 적극적인 창작자로 이끌어 우리 예술계 전반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회참여 과정을 통해 장애 예술인들은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과정은 사회통합과 공동체 사회의 이념을 다듬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장애 예술인 창작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장애 예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